
중견기업 핵심 정책과제

2022. 12.

목 차

1.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추진	1
2. 법인세 인하	2
3.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3
4.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5
5.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7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9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11
8.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3
9. 상속세율 인하	15
10. 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17
11.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19
1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1
13.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22
14. 국가 R&D 지원체계 개편	23
15.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25

목 차

1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마련	27
17. 임금체계 개편	28
1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30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31
20. 근로시간제도 개선	32
2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33
22.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35
23. 대기관리권역법상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 ..	37
24.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	38
25.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40
26.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41
27.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42
28.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44
29.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 ..	46
30.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48

1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추진

□ 관련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2.12월 현재 한시적 규정(부칙 제2조)을 삭제하는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 중견기업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 ①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안(2115834) :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부칙 제2조) 삭제
- ②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안(2118325) :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 정책을 상시화하고 중견기업 국가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시적 규정(부칙 제2조) 삭제

□ 현 황

- 중견기업법 일몰('24.7월)이 도래함에 따라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5,526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158만명), 수출의 18.2%(931억불), 매출의 16.1%(770조원)를 차지하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군(*'20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경제적 기여도>

	중견기업 수(개)	매출액(조원)	수출액(억불)	종사자(만명)
2017년	4,468(0.7%)	738(15.5%)	908(15.9%)	136(13.6%)
2018년	4,635(0.7%)	767(15.7%)	982(16.3%)	141(13.8%)
2019년	5,007(0.7%)	782(15.7%)	936(17.3%)	149(14.3%)
2020년	5,526(1.4%)	770(16.1%)	931(18.2%)	158(13.8%)

* ()은 전체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 구성 비중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 산업생태계에서 원사업자이자 협력사로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핵심 기업군임

□ 건의내용

-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일화 추세¹⁾
 - 지난 10년간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
 - * 최고세율('11년→'21년, % 지방세 포함): OECD평균 25.3 → 22.9, G7평균 32.8 → 26.7, 한국 24.2 → 27.5(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조세수첩)
 - 법인세 과세기 33개국이 단일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네덜란드·프랑스는 2개 구간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포르투갈은 4개 구간 적용
- 한국의 법인세는 '18년부터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5%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역행
 - ※ 2022년 개정세법('22.12.23 국회 통과)에 따라 일부 완화(과표구간 별 1%씩 인하, 최고세율 24%)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 법인세 부담 증가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반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총자본유출을 초래
 - * 해외직접투자(기재위) : '17년 494.3억 달러 → '20년 717.2억달러(222.9억달러 증가)
외국인직접투자(산업부) : '17년 229.4억달러 → '20년 207.5억달러(21.9억달러 감소)
-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추진, 탄소국경세 부과 등 각국의 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독려 필요

□ 건의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1) KERI, “글로벌 흐름에 맞는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축소 필요”, '20.9.2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9조

□ 현 황

- R&D,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원이 중견기업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중견기업 매출액 범위	세제지원 내용
5천억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보세구역 특례,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3천억원 미만	-(R&D·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고용)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직자 재고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2022년 개정세법('22.12.23 국회 통과) 내용 반영

□ 문제점

- 조특법은 각종 세제지원을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기업)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중견기업에 대해 매출액 상한 기준(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두어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저해

-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애로를 겪는 상황에서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 대해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재차 축소하여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4.3%, 금융지원 21.3%, 공공조달 지원 10.3%, 중소기업 적합업종 9.1%, 기타 5.2% 順(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실제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매출액 3천억원~5천억원 구간에서 매출액·영업이익·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성장 정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주요 경영지표 증가율>

매출 규모	기업 수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수출액
1천5백억원 미만	594개	8.67%	7.86%	6.29%	3.52%	4.85%
1천5백억원~3천억원	674개	-0.76%	-7.38%	3.51%	4.09%	-0.09%
3천억원~5천억원	266개	-1.85%	-12.51%	2.56%	0.32%	-5.33%
5천억원~1조원	173개	-0.23%	-7.14%	4.50%	5.42%	-0.50%
1조원 이상	98개	-0.49%	-0.44%	5.33%	2.27%	-7.28%
전 체	1,805개	0.26%	-4.41%	4.49%	3.11%	-3.37%

* '17년~'20년 재무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규모 중견기업 1,80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의 경영성과를 항목별로 비교(중견련)

- 현행 조특법령에서 동일 기업군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며 이는 기업 간 조세형평에 위배
- 대기업-중견기업 간 경영실적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과도

* 대·중견기업 경영실적(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및 2020년 기업경영분석)

- ① 매출액 : 중견기업 770조원, 대기업 2,303조원 ⇒ 3.0배
- ② 영업이익 : 중견기업 37조원, 대기업 111억원 ⇒ 3.0배
- ③ 자산총액 : 중견기업 989조원, 대기업 3,676조원 ⇒ 3.7배

-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기준을 개선하여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ESG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모

□ 건의내용

-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R&D 세액공제 5천억원 미만)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0~2%

□ 문제점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수준('20) :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80.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국 80.3% 미국 72.6% 일본 79.4% 독일 68.9% 프랑스 65.4% 영국 67.6% 중국 77.4%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 평균 신규 채용 추이(중견기업 기본통계) : ('16년) 23.2조원 / 56.8명 → ('18년) 24.2조원 / 40.4명 → ('20년) 19.0조원 / 46.2명 → ('22년 계획) 14.5조원 / 34.4명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78,171	81,106

*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

-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차 15% → 중견 4~5년차 10% → 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중소(13.1%)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17.5%), 상출집단 소속 기업(18.0%) 보다는 높은 수준

* 회귀검토요인 : 세제혜택 54.3%, 금융지원 21.3%, 공공조달지원 10.3%, 중소기업 적합업종 9.1%, 기술개발지원 2.1% 순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건의내용

- (1안)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기업규모 관계없이 전체 기업 확대(25%) 및 당기분 방식 공제율 상향

* 공제율 : (現)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2% → (案) 전체 기업 25%

- (2안)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매출 5천억원에서 2조원 미만 확대 및 당기분 방식 공제율 상향

* 공제율 : (現)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2% → (案)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3~20%, 대기업 7%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문제점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지원을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5%)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19개사(7.5%)
(통계청,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원	11.1%	249억원	4.4%	4,751억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원	72.4%	2,228억원	8.1%	5,377억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액지원 중 상장 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였으나 상장 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현 황

- 사업용 유형자산(일부 자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 12%, 중견 5%, 그 외 기업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 16%, 중견 8%, 그 외 기업 6%

-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 문제점

-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2년에도 감소세가 여전할 것으로 나타나 투자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시급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22(계획)	2019	2020	2021	2022(계획)
대 기 업	119.3	123.6	133.3	148.3	155.6	3.6	7.8	11.3	4.9
중견기업	28.2	24.6	24.1	23.8	23.3	△12.7	△1.9	△1.2	△2.4
중소기업	20.2	18.0	9.0	8.2	8.1	△11.2	△49.9	△8.7	△1.2

* KDB산업은행, 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

- 또한,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ESG경영 확산 등으로 에너지·환경·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축소되어 비용부담 가중으로 인해 투자 시기가 늦춰질 우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

[안전시설] (前)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前) 중소 10% 중견 5% 그 외 3%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前) 중소 7% 중견 3% 그 외 1%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

-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견·대기업은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가장 선호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정책 만족도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

* 기업규모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KDB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

[대기업] 세액공제 55.8%, 정책금융 29.2%, 규제 완화 15.0% 順

[중견기업] 세액공제 48.4%, 정책금융 39.9%, 규제 완화 11.7% 順

[중소기업] 세액공제 41.9%, 정책금융 44.9%, 규제 완화 13.2% 順

-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20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격차가 일괄 7%로 증가(개편 전 투자시설별 1~5%)함에 따라 지원절벽이 심화되어 이를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4.3%, 금융지원 21.3%, 공공조달 지원 10.3%, 중소기업 적합업종 9.1%, 기타 5.2% 順(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건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현행) [일반] 중소 10%, 중견 3%, 대 1%, [신성장] 중소 12%, 중견 5%, 대 3%
⇒ (건의) [일반] 중소 10%, 중견 7%, 대 3%, [신성장] 중소 12%, 중견 9%, 대 5%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현 황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23.12.31까지,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문제점

- 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는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혁신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과제를 발표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7번, '22.5월)

- 조세특례제한법 내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중소→중견 성장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3%^{*}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372만원(중견연,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 중견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2순위 :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6.4%),
중견기업 근로자 이직원인 1순위 : 낮은 임금수준(18.1%)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 기업규모별 제조기업 비중(통계청, '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통계) :
중소기업 20.1%, 중견기업 38.5%, 대기업 20.7%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건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2030 NDC 상향('18년 대비 26.3%→40%)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 특히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상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상향(기준 6.4%→14.5%)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제에 악영향 초래 우려
- * GDP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한국 26.1, 일본 19.5, 독일 17.0, 유럽 14.0, 미국 10.6
- 탄소감축 관련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취약해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2030 NDC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탄소감축 및 에너지 관련 기술수준은 주요국 대비 부족하며, 최고기술 수준 국가와 비교해 1~5년의 기술격차 존재

<주요국의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수준 비교(2020)>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탄소저장·포집·이용	80(5년)	100	95	90	82.5
수소·연료전지	75(3년)	93	95	100	70
고효율 태양전지	90(1년)	93	100	97.5	87.5
풍력발전	75(5년)	90	100	76.5	80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78(4년)	100	100	85	75

* ()은 최고기술 국가와 격차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기준 기술수준평가, '21.3월

- 산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
-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R&D·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R&D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건의내용

-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국가전략기술(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지원 확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R&D 지원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산업 현실을 감안한 NDC 목표 조정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년 상속세액은 3조 9,042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7%가량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원, %): ('10) 12,028, 0.72 → ('15) 19,437, 0.93 → ('20) 39,042, 1.30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 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 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 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건의내용

-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승계취득가액 과세)* 도입

* 상속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 2022년 개정세법('22.12.23 국회 통과) 내용 반영
-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특히,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비해 기업당 약 8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169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378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0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사업전환 등이 요구되나 가업상속 공제 사후요건에서 업종변경을 제한
- 특히, 최근 제조업의 스마트화, 비대면 서비스업 확산 등 ICT 중심의 산업환경 변화가 나타나면서 업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유지를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는 불합리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 및 공제한도(최대 6백억원 → 최대 1천억원) 확대
- 사후 업종유지 요건 폐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

-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기업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16개(대분류 기준), ②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17개

<현장 애로 사례>

- ① A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에 해당)
 -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단,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고용알선업(75110)"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으로, 유사·동종사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②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골프장의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특히,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대분류 내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중분류, 세분류 등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가업 해당 업종
광업(05~08)	광 업 전체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단,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등 5개 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교육서비스업(85)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
 -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120대 국정과제, '22.7월)
-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평가(단, 중소 및 일부 중견기업 제외)하여 상속세 부과

※ 2022년 개정세법(22.12.23 국회 통과)에 따라 일부 중견기업(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기업승계시 애로사항 :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67.6%**, 복잡한 지분구조 9.7%, 엄격한 기업승계요건 8.2% 順(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특히,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의 시가(時價)에 따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 건의내용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 중견기업(83.4%)*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

* 중견기업 현황('20년말 기준) : **비상장 4,607개(83.4%)**, 코스피 463개(8.4%), 코스닥 452개(8.2%), 코넥스 4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의 국가 R&D 집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국가 R&D 예산 24.2조원 중 중견기업 집행액은 1.8조원(7.6%)**에 불과

* 중견기업 국가 R&D 집행액 : ('16) 0.7조원 → ('20) 1.8조원

** 과기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1.8월)

- 현행 국가 R&D 지원체계는 중소기업 우선 분배 방식과 경직적인 관리 관행* 등으로 국가 R&D 성과창출을 저해

* 예 : ①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당초 수립한 목표대로 과제 종료 시까지 수행, ②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 시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 종료를 기피, ③ 사업기간 동안 연차 협약, 복잡한 신청서류 작성 및 성과보고대회 등 부수적인 행정업무가 과다

- 실제로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조원에 이르지만 기술이전을 통한 R&D 성과 활용**과 사업화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

* 국가 R&D 예산(조원) : ('18) 19.7→('19) 20.5→('20) 24.2→('21) 27.4→('22) 29.8

** 공공연구소가 정부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비율은 '16년 60.3%에서 '20년 40.8%로 크게 하락(산업부 등, 202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21.12월)

***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반면 사업화율은 절반 수준(38.5%)에도 못미쳐 국가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김경만 의원실 자료, '21.10월)

- 비효율적인 국가 R&D 지원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국가 R&D 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중견기업 국가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중견기업 경제기여도 : 기업 5,526개사(1.4%), 매출 770조원(16.1%), 종사자 158만명 (13.8%), 수출 931억불(18.2%)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건의내용

- 국가 R&D 지원체계를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이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촉진형으로 재설계
 - 중견기업 매출수출고용 등 경제 기여도에 부합하는 규모로 R&D 예산 확대
 -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매년 노조 파업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으로 근로손실과 생산차질로 인해 기업의 피해 증가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노사분규건수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05.9
근로손실일수(천일)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750.3

* [출처] e-나라지표

-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분야는 141개 국가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 (WEF, "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19.10월)

- 외투법인은 국내투자시 애로요인*으로 노사관계를 1순위로 응답

* 노사관계 34.8%, 경영환경 24.6%, 임금수준 24.6%, 정부규제 21.7%, 정치적 안정성 13% 순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19.10월)

- 여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이 '2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간 힘의 불균형 더욱 심화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 해고자·실업자까지 노조활동이 가능해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장 불법 점거 등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 우려

-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대해 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방어권 보장

<주요국의 노조 단결권에 대한 방어권 비교>

구 분	주요 내용
미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근로조건 향상 위한 파업시 영구 대체 가능)
독 일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일부 허용(파업불참자·도급 등)
프랑스	직장점거 원칙 금지(예외 허용), 대체근로 가능(파견·기간제 근로자 대체 금지)
영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파견 제외)
일 본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영구 대체 불가)
한 국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 건의내용

-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조성을 위해 노사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및 직장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
 -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 활동 금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에 막대한 부담 가중
 - *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책임 5배,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벌금부과(사망 50억원 이하, 상해 10억원 이하)) 등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사업주 부재로 인한 기업 경영 공백을 야기하고 생산·투자 차질 유발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온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킴
 - * 사망사고시 처벌 수위: (영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 (독일)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천유로(약 6,100만원) 벌금, (미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불(약 1,100만원) 이하 벌금, (일본)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 벌금(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21.12월)

□ 건의내용

-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산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

<호봉제 운영 현황>

		전체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전규모		13.7%	13.4%	55.5%	60.1%	70.3%
노조	無	11.2%	11.0%	47.9%	42.7%	42.5%
	有	67.4%	67.6%	64.8%	73.3%	81.8%

* [출처] 고용부, 2021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1.11.16

-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은 EU 15개국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격차 : (한국) 3.3, (일본) 2.5, (독일) 2.1, (이탈리아) 1.8, (덴마크) 1.7, (EU(15개국)) 1.7, (영국) 1.6, (프랑스) 1.6 (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15.12월)

-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임금 괴리로 인해 공정한 성과배분을 막고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가능성을 높이며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우려
- 미국·독일·영국 등은 직무가치에 기반한 직무급을 기본 임금체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은 역할급·직무급을 임금체계에 반영

<국가별 임금체계 특징 비교>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지배적 임금체계	호봉급	직무급	직무급	직무급	연공급·직능급
핵심특징	연공	직무가치 세부등급	직무·숙련	직무가치 세부등급	연공·숙련
역사적 임금 체계 변화	호봉급→직능급 →연봉제	직무급→숙련급 →브로드밴딩	숙련 직무급 → 성과급	직무급 → 성과급	연공급→직능급 →역할급
최근 임금체계	호봉급 연봉제	브로드밴딩 시장임금률 숙련·역량급	숙련 직무급 성과급	직무급 성과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 [출처] 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15

-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중·고령층의 고용유지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

□ 건의내용

-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나 능력 또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기업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
 - * 중견기업 제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 적합한 인재부재(44.8%), 지방소재(19.9%),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5.5%) 順으로 조사(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특히, 뿌리산업은 주력산업의 원천기술로 활용됨에도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렵고 직원의 고령화로 기술단절 우려
 - * 뿌리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0년 결산 기준 제조업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 기업은 985개사이며, 뿌리기업은 301개사임)

□ 건의내용

- 지방 소재기업 및 뿌리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이며, '21.9월부터 중견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 (대상) '16년 중소중견 → '20년 중소중견(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21.9.8 중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확보에 상당한 기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현황(고용부 보도자료, '21.8.26)

[가입청년 수] ('16년) 5,217명, ('17년) 40,170명, ('18년) 106,402명, ('19년) 98,572명, ('20년) 137,226명, ('21.7월) 91,749명

[가입기업 수] ('16년) 2,788개, ('17년) 18,268개, ('18년) 39,365개, ('19년) 41,255개, ('20년) 54,376개, ('21.7월) 42,095개

[근속비율] (1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46.6%, 공제가입청년 78.6%, (2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33.0%, 공제가입청년 67.3%

** 석·박사 가입 수 : ('16년) 74명, ('17년) 1,480명, ('18년) 4,326명, ('19년) 3,709명 (한국노동연구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태 분석」, '20.2월)

- 중견기업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여전히 채용 애로를 겪고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외로 중견기업 인력확보 애로 가중 우려

* 신규채용 애로요인: 적합한 인재부재(48.7%), 낮은임금(15.7%), 지방소재(13.4%)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주52시간제 시행 후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도입요건이 까다로우며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상승·인력난 등으로 경영부담 가중
 - *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3월 → 6월),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 확대(1월 → 3월(연구개발업무)),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돌발수습·업무량 폭증 등 추가) 및 기간확대(연 90일), 사업장 단위 인가
- 또한 직무별·업종별 특성이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 발생
 - 계절적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단축에 한계
 - 다품목·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하나 획일적 규제로 R&D·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되어 경쟁력 약화
-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건의내용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現) 6月→ 案) 1年) ,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現) 1月(연구개발업무 3月) → 案) 6月)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개선(사업장 → 근로자)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법률	규제 대상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5년 단위 주기적 강화)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환경오염시설법 (‘15.12 제정, ‘17.1 시행)	19개 업종,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연간 20톤 이상) * ‘17년부터 업종별 연차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대기관리권역법 (‘19.4 제정, ‘20.4 시행)	총량관리사업장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SOx 4톤, NOx 4톤, TSP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 관리물질 7종(총량관리 3종) - 총량관리사업장 TMS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배출기준 적용, ‘대기관리권역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부담 급증

- ‘대기환경보전법’은 ‘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종전보다 평균 30% 강화

* 질소산화물(ppm) (종전) 20~530, (‘20.1) 10~250, (강화율) 28%,
 황산화물(ppm) (종전) 10~540 (‘20.1) 10~250 (강화율) 32%,
 먼지(mg/Sm³) (종전) 10~70 (‘20.1) 5~50 (강화율) 33%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BAT를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최대배출기준은 TMS 30분 데이터 중 이상값을 제외한 99% 신뢰도 구간 최고값이며, 30분 TMS 농도가 3번 연속 초과하면 기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의 70~80% 수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전²⁾

2) 공성용 외, 「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KEI 정책보고서 2019-01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에 따라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오염물질별·권역별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단위: 톤, %)

			'19년 배출량	초기연도('20년)		최종연도('24년)		'19년대비 삭감률(%)
				할당량	'19년대비	할당량	'19년대비	
오염 물질별	계		373,217	357,685	95.8%	228,453	61.2%	38.8
	질소산화물(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황산화물(SOx)		105,952	112,271	106.0%	66,048	62.3%	37.7
	먼지		4,211	4,735	112.4%	3,732	88.6%	11.4
권역별	계	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SOx	105,952	112,272	106.0%	66,049	62.3%	37.7
	중부권	NOx	117,733	101,352	86.1%	72,294	61.4%	38.6
		SOx	36,296	41,014	113.0%	19,251	53.0%	47.0
	남부권	NOx	60,734	51,684	85.1%	35,480	58.4%	41.6
		SOx	26,969	29,615	109.8%	19,205	71.2%	28.8
	동남권	NOx	84,587	87,643	103.6%	50,899	60.2%	39.8
		SOx	42,688	41,643	97.6%	27,593	64.6%	35.4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0.19.)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배출농도 저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량을 줄여야 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았음에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이중 부담

□ 건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배출허용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 면제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대기총량제가 전국 4대권역으로 확대되면서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 대기환경개선 목표, 배출원별 배출량, 대기오염도, 배출원별·행정구역별 배출허용총량, 저감계획, 총량관리 오염물질 할당 기준, 직전 계획 평가 등 포함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대기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권역의 기업에게 할당량을 분배

* 배출총량 관리는 권역 내 1종~3종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

- 배출허용총량 관리가 사업장별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할당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

<권역별 총량관리사업장 배출 허용 총량>

(단위 : 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NOx	SOx	NOx	SOx	NOx	SOx	NOx	SOx	NOx	SOx
수도권	39,885	13,620	39,352	13,166	38,266	12,865	35,061	11,983	31,157	11,100
중부권	135,562	50,771	123,633	44,251	112,588	37,683	98,520	29,822	87,038	23,254
동남권	112,098	55,750	102,779	51,287	93,461	46,824	80,924	40,920	74,726	36,488
남부권	60,722	40,503	59,639	36,580	52,447	29,927	48,707	26,151	45,038	22,218

* (출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20)

- 대기오염 총량 지역의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기초조사(19.6월~7월 실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별 배출정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배출 허용총량 과소 산정에 따른 할당량 부족 발생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설정시 기존 배출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배출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 총량관리사업장은 과소산정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배출허용총량 추가로 받아야 하나 사업장 소재 지자체의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 배출허용총량도 부족한 상황
- 일부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 과소산정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 설비 투자비용 증가로 어려움 발생
- 또한, 설비투자를 하였음에도 배출허용총량을 급격히 낮추기도 어려워 배출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현장애로사례

- A사는 1종사업장으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당시 SOx 측정 면제 사업장이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포함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설정시 기존 배출자료가 없어 사업장 배출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총량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SOx 배출량 측정을 위해 TMS를 설치한 결과 실제 배출량보다 배출허용총량 과소 설정으로 기업 부담 증가
- 또한, 인접 권역 배출거래도 허용되지 않고, 권역내 배출 총량도 부족해 '24년에는 300억원 이상 배출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

□ 건의내용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변경 필요가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과소산정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으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 불황 등으로 생산활동이 감소한 업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배출허용총량을 작게 할당받았으나, 업황이 호전되어 생산활동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할 경우 총량초과 과징금을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배출허용총량도 삭감
- 신·증설 시설은 지역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만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이 가능하며, 여유분이 없는 경우 추가할당 불가

□ **건의내용**

- 업황 변동이나 신·증설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기준 마련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9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오염물질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을 '17년부터 업종별로 시행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1종·2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업종별·오염물질별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또한,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보다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적용
 -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배출 농도 허용기준이 사업장별로 적용됨에 따라 대기농도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
 -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배 이상 강화되면서 대기농도 기준 이행에 대한 부담 가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월)에 따라 총량제 적용지역이 전국 4개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해당권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대기농도와 총량이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이중규제로 어려움 가중
 -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77개 시·군

- 특히, 기존 1종·2종 사업장에 적용되던 배출농도특례 조항이 삭제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

<총량사업장 대상 특례 비교>

구분	수도권대기법('20.4.2 폐지)	대기관리권역법('20.4.3 시행)
농도특례	1종~3종 사업장 130% 완화	3종 사업장만 130% 완화

* (출처) 환경부

현장애로사례

- D사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준비 중으로 오염물질배출 기준 강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오염물질별 모델링을 통해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이 결정되나 사업장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출허용기준도 너무 낮아 기업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건의내용

-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별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완화
 -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 산정 시 기업의견 반영을 통해 규제 이행 부담 최소화 필요
- 대기총량제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1종·2종 사업장은 농도특례 130% 적용

- **관련법령**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을 위한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확인 절차를 통해 등록면제가 가능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목 소량을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등록면제 확인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증가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용도, 공정도, 화학물질안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또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업은 행정기관의 면제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연구개발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 연구개발 특성상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야 함에도 환경공단 등 행정기관의 등록면제 승인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

현장애로사례

- F사는 자사 연구개발 및 시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필요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해당물질 등록 면제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
- 그러나 연구개발 등록면제 서류가 복잡하고 면제승인까지 3개월 이상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시제품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

□ **건의내용**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 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
-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유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 한계

* (사례) 비산재 등 산업부산물을 탄소포집활용(CCU) 기술로 처리하여 생산한 탄산화물 등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 어려움

□ **건의내용**

-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관련법령** : 자원순환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인정 제도’ 운영 중

순환자원 인정기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안), 2017.12)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시행규칙 제6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 실제로 순환자원 인정건수(465건) 중 왕겨 및 쌀겨(259건), 폐지류(115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37건), 폐금속류(24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

* 그 외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식물성잔재물 13, 폐유리류 6, 무기성오니류 3, 분진류 3, 폐석고·폐석회 2, 폐목재류 1, 폐섬유류 1, 광재류 0, 폐사료 0(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22. 9. 20 기준)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폐기물	용도	폐기물	용도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2. 탈황석고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사료 원료

* (출처)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022. 6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건의내용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 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 되는 경우 포함

- (2안) 유가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필요

- 유상거래 실적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 후 6개월 이내 실적을 제출허용
-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부처 경제법률 조사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99년 1,868개에서 '19.10월말 기준 2,657개로 크게 증가(KERI 보도자료, '19.11.13)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시 시정명령·조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에 징역형 등 형벌까지 부과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벌칙조항인데, 여기에 규정된 범죄행위는 약 120여개 이상으로 조사

<환경 관련 주요 법률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부과>

	벌칙			행정제재
	징역형 또는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환경오염시설법	5~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억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 허가취소,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	1~7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7천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1~7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7천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2~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	○	1백~1천만원 이하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리금지, 시설폐쇄
소음진동관리법	6개월~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폐쇄,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6개월~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2억원 이하 벌금	○	천만원 이하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가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영업정지·조업정지의 경우 기업은 생산·납기 차질→매출·이익 감소→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적게는 수백명 협력사까지 하면

수천명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있어 행정처분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며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음

□ 건의내용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환경규제는 기업의 입지, 오염물질 배출, 원료사용, 폐기물 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적용되고 다수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화학물질안전원 등 각 행정기관별로 환경규제 이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별 기업은 혼자 각 기관별로 대응해야 어려움이 존재
 - 또한 SO_x, NO_x 등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농도와 총량 규제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비슷함에도 각 기관별로 규제 이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
- 또한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 점검시기도 기관별로 달라 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장 점검에 의한 행정조치가 개선명령보다는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처벌위주의 단속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발생

<환경법규 위반 조치사항>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선명령		1,155	1,328	1,436	1,117	1,321
제재명령		1,495	2,456	2,037	1,857	1,780
	조업정지	441	594	551	428	346
	사용중지	613	654	706	490	445
	허가취소	5	478	56	187	200
	폐쇄명령	355	609	576	644	629
	순수고발	81	121	148	108	160

*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현장애로사례

- L사는 대기오염, 수질, 소음 등 다양한 환경규제를 적용받은 기업으로서 오염물질별 규제 이행 서류를 행정기관별·행정기관 부서별로 요구하고 있고 사업장 점검도 기관별로 달라 각 행정기관별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기업의 환경담당자는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행정기관 대응으로 인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본래 환경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내용

- 환경규제 이행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대기·화학물질 등 동일오염물질 규제 이행서류 통합 제출
- 행정기관 사업장 점검 시 적발 위주 보다는 개선중심으로 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배출 등 환경 문제와 안전·보건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 또한 투자회사가 ESG 경영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SG에 소극적인 기업은 향후 투자 및 고객 유치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년 블랙록은 전년 대비 ESG경영에 대한 주주관여가 대폭 증가(환경(E) 289%, 사회(S) 146%, 지배구조(G) 46% 증가(삼정KPMG, 삼정 인사이트 Vol.74, '21.2월))

- 중견·중소기업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자본 등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 수출중소·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

*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37.6%), 공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표준 마련(32.7%), ESG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견련, ESG 경영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1.6월)

-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ESG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컨설팅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책 필요

□ 건의내용

- 환경·안전 등 ESG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시 세제지원 확대
 - ESG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중소 15%, 중견 10%, 대 5%
-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마련